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의 비전과 자격요건

조덕호(대구대학교 교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전))

4기충천 성공세상 행복국가 대한민국포럼

chodh0115@gmail.com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최초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며, 세계 일등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확행(작지만 확실히 행복한)을 넘어, 지확행(지방이 확실히 행복한), 대확행(대한민국이 확실히 행복한), 인확행(인류가 확실히 행복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설계도 없이 좋은 건축 자재만 쌓아 둔다고 해서 멋진 집이 되는 것은 아니며, 멋진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설계도가 필요하며, 대한민국 지도자는 반드시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없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국가발전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후보자에게 질문과 함께 정책대안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살림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지방 살림은 당연히 지방정부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지방정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으며, 그 결과 중앙과 지방 사이에 회복하기 힘든 격차를 만들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지난 60여 년에 걸쳐 중앙정부 주도로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하여 UN 원조를 받는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하였으며,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빛나는 성과는 90% 이상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가능했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주로 혜택을 보았지만, 그 그림자는 지방과 농어촌에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지방소멸과 절망의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고, 세대 간, 지역간, 빈부격차, 높은 자살률, 노인 빈곤 등 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행복하지 않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집값 파동은 코로나19와 경제쇠퇴와 각종 재정지원정책으로 갈 곳을

있는 자금이 주택시장에 몰려오면서 나오는 당연한 현상인데, 역대 정부가 미리 대처하지 못했고, 이는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택과 토지는 공급은 부동산이지만 수요는 동산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수도권 1인 가구 증가, 지방 수요 심지어 해외 수요까지 서울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수요 공급이론으로 부동산을 설명하는 것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기존의 저당제도와 역저당제도를 융합함으로써 젊었을 때는 주택에 저축하고 퇴직 후에는 자금이 필요하면 찾아 쓸 수 있는 통장주택은 최근 논란이 가열되는 연금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 걱정과 돈 걱정 없는 통장주택 혹은 평생 주택으로 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우리는 왜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에서 불거리가 전혀 없는 아파트 숲을 만들면서 싱가포르, 중국 상해의 푸둥 지구,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같은 명품도시는 만들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이 부족하니까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집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청계천을 다시 덮고, 한강을 덮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방이 위기와 절망의 시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국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동시에 함께 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지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감소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매우 심각합니다. 학교, 병원 등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프라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지역 역시 위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산업구조개혁에 실패한 도시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성장이야말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명의 과제입니다. 지역 균형성장의 엔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히, 인구소멸,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기존의 모든 정책을 재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의 효과를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공단 재생이 불가피한데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까? 특히 지역 불균형 발전의 가장 핵심인 지표인 예비타당성 지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서울로 몰리도록 설계되어 있고, 국도나 지방도로가 생기면 그 지역은 발전하지만,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중소도시나 시골 지역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므로 고속도로 요금소를 대폭 확대 혹은 없애서 진·출입이 자유롭게 하여 지역자원의 서울 및 수도권 빨대 효과를 완화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각 정당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역대 어느 정부의 정책이 균형발전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얼마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어느 정도 불균형이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도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불균형이 되어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성영상, 지리정보시스템, 통계 데이터들 사이에 위치 정보인 좌표로 융합되지 않아서 분석 결과를 정확히 아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대부분 정책이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발행하는 모든 데이터에는 좌표값은 공유하여 융합할 수 있게 하여야 진정한 빅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직접 시정과 도정을 이끌어 본 분으로서 대학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유목민 시대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는 전 국토 IoT 시대를 열어서 디지털 트윈에 기반을 둔 메타버스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도시화(urbanization) 정책에서 농산어촌화(ruralization), 시골화로 가는 것이 개발시대의 그림자를 지우고, 각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ESSD(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ESSC(지속 가능한 변화)로 바꾸는 것이 균형발전의 핵심이며,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모두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후보자께서 제시하신 에너지 고속도로와 함께, 전 국토 WIFI 고속도로, 위·지·통 빅데이터 고속도로가 국가 3대 기본 인프라인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지역균형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주말마다 서울로 되돌아오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

는 가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제공하는 교통 수요관리 정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데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논문을 idea 혹은 내용을 일부 중복 혹은 인용 없이 사용하면 표절에 걸려 제재를 받는데, 우리나라의 법령, 정부 조직, 예산 등을 AI를 활용하여 중복, 대립, 낭비의 요소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후보께서 제시한 기본소득과 역강부약의 자전거에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주택, 직업, 교육과 기업의 성장, 기회의 공정성이 융합된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로 전환되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국민이 좀 신나는 4기 충천 성공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자치분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얼마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자치분권과 교육자치와 교육혁신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는 지방정부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많은데 대선공약에 밀려 지방자치가 축소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은 바로 인재 양성인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은 있지만, 교육 뉴딜이 빠져있습니다. 미래사회 교육의 핵심인 도덕과 창의성 교육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으며 또한, 학교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별로 보이지 않는 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난해에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수능을 없애면 노벨상이 나온다”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교육 뉴딜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국의 학생을 수능점수에 따라 줄을 세우는 정책은 과도한 경쟁과 불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학생들이 모두가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머릿속에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말로 하거나, 글로 쓰는 것인데, 우리는 AI가 할 수 있는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교육의 병행으로 지식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지혜 교육,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습득한 지식을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발표하고, 교수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고, 도덕과 창의성으로 무장된 인재를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 실습실이 공단 혹은 사회 현장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의미의 산·학·연 융합이 가능한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제 경제는 시장, 공유경제를 넘어 구독경제로 발전하며, 구독경제란 신문처

럼 일정한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직장도 취업하는 시대를 넘어 스스로 각자 자기 직장을 만드는 시대이며, 많은 청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국가 자산인데 이를 위한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적어도 1회 이상, 특히 문화 예술을 포함한 전 전공에 걸쳐서 역구독 창·취업(청년이 창업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구독료를 부담)정책으로 청년들이 창업하면 기본소득 차원에서 적정수익을 보장하여 자기 직장을 자기가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의 취업 대책과 관련하여 대부분 후보자가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의 시대로 바꾸기 위해 청년들에게 적어도 1회 이상 역 구독 창·취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젊은이가 신명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를 기본소득, 장학금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농산어촌이 선진국이 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농산어촌 기본소득과 함께 전 국토 IoT 시대를 열어서 디지털 트윈에 기반을 둔 메타버스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에서 3일 살고 농산어촌에서 4일 사는 이른바 도3 농4 정책이 필요하며, ‘two jobs and two housing policy’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을 생산, 가공, 유통으로 산업을 융합하고 이를 관광과 연계하여 농업을 식량, 바이오 생명산업과 융합된 7차 산업으로 개편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산어촌으로 귀촌하고 싶지만, 실행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어촌의 빈집과 폐농지 자원에 대해 역구독 정책(역구독 주택, 역구독 농지)을 마련하여 농산어촌 개벽을 유도하고 접근 문턱을 낮추어야 합니다. 보통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메가시티 개발, 시군구 살리기 등을 이야기하는 데 읍면동이 살지 않은 한 모두가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정과 샛강부터 살려야 큰 강물의 수질이 개선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회생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의 뿌리인 읍면동 살리기를 기반으로 식량안보와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반드시 배워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최무선 장군이 범하였던 우를 다시 범하지 않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와 목활자로 찍어서 전 세계로 보냈다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바다를 지

키는 데 머물지 말고, 콜럼버스와 함께 미국으로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최무선 장군이 고려 시대부터 화약을 활용을 계속했다면 우주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은 것이라는 유쾌한 상상을 해 봅니다.

세계 최초로 만든 목활자 금속활자로 찍은 한글을 초대형 유람선으로 전 세계로 로켓에 싣고 우주로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다 같이해 봅시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그런 것을 해 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너무 모르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 최고의 국운 융성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지만, 현재의 대선 정국은 각 진영끼리 네거티브 설전만 난무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사이에 한민족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위대한 공약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많은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를 들면 후보자님께서서는 지확행으로 특히 남부 수도권 공약을 발표,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 통합에 중점을 두었는데, 수도권과 충청·강원의 중부권, 영·호남과 제주를 묶는 남부권을 각각 초광역 단일경제권으로 만들어 '2개의 초광역권'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지원, 민간투자 확대, 외국 자본 유치 등 3박자 경제활력 전략을 통해 현재 국가 3분의 1 수준인 남부지역 GDP를 절반으로 끌어올리고 G5에 들어가는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지요?

수도권을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고, 중부권과 남부권 수도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남부권 발전계획은 333 지역균형전략으로 3개의 교통수단(고속철도, 항만, 공항), 3개의 지역(부·울·경, 충북과 대구·경북, 충남과 광주 전라남북도지역)에 3개의 산업(물류, 디지털, 그린 산업)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부·울·경은 교통수단이 융합된 물류 중심의 메가시티로 충북과 대구·경북은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인공태양 만들기 관련 산업, 충남과 광주 전라남북은 그린 뉴딜로 상징되는 재생에너지와 광합성 칩 만들기 관련 산업, 강원도와 제주도를 국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국민 힐링 지역으로 발전하는 남부권 대 발전전략으로 가야만 실현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확행으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위·지·통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고속철도를 북한과 협력하여 중국의 단둥지역과 연결하고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하는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국제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인확행(인류가 확실히 행복한)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종전선언, 평화선언을 넘어 국제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계의 균형성장 전략, 즉 지구 남반부 발전전략 등 인확행 혹은 세확행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본회의에 4번이나 참석해 연설하면서 종전선언을 제안하셨지만, 좀 아쉬운 것은 그때 본회의에서 한국이 중심으로 예를 들면 No Hungry Children in the World (NHCW: 어린이가 굶지 않는 세상) UN 기구를 제안하고 한류의 대세인 BTS가 UN 본회의장에서 주제를 부르고 세계적인 부호들에게 자금을 지원받아 북한의 어린이를 포함한 전 세계 어린이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면 더 멋진 대한민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UN 지원을 받아 세계 최초로 선진국이 되었고, 일등 국가로 역사상 처음으로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실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경제, 공유경제를 넘어 구독경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주도로 민주주의를 넘어 지혜 민주주의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넘어 지속 가능한 변화로 세계 선도국으로 거듭나서 널리 인간과 종의 다양성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국가 최고 머슴으로서의 포부와 비전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세계 G5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으로 어린이가 학대받지 않고, 청소년이 자살하지 않고, 노인이 고독사하지 않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여 년 만에 해결한 산업화 도시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빛을 더욱 빛나게 하고,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는 전 국토 IoT(DIGITAL TWIN을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시스템 구현) 시대를 열면서 코로나19, 디지털 격차 해소, 탄소 제로, 식량안보 등을 해결함으로써 행복 국가로 가야만 5000년 만에 처음으로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의 근본적인 방향이 3대(에너지, IoT, 데이터) 고속도로를 활용하여 원하면 어디에서나 일하고 쉴 수 있도록 도시화(urbanization)에만 집착하지 말고, 좋은 환경 즉 자연과 함께하는 농산어촌화(ruralization)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전 국민의 4기(소득, 주택, 직업, 교육)가 충족한 성공(기업의 성장과 기회의 공정) 세상, 행복 국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어야만 진정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을 텐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능가하는 ‘지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능가하는 ‘구독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ESSD)을 넘는 지속 가능한 변화(ESSC)의 거대 패러다임이 실현되어 전 인류가 행복한 홍익인간의 세계가 이루어지길 것입니다.

2022년 3월 7일